

보도	2023.7.31.(월) 조간	배포	2023.7.28.(금)		
담당부서	금 용 감 독 원 여신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종오	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남영민	(02-3145-7440)
	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	책임자	상 무	방태진	(02-3705-5800)
		담당자	부 장	이병철	(02-3705-5830)
	여 신 금 융 협 회 금융본부	책임자	본부장	이태운	(02-2011-0710)
		담당자	부 장	백승범	(02-2011-0619)

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

- 주요 내용 -

-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, 할부,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
 - 특히 사기범들이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하여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있었음
-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, 한국신용정보원,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'23.8.1부터 시행할 예정

<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>

- ❶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하여 안내
- ❷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,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
- ❸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·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 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

I. 자동차 금융 편취 사기 사례

① 수익금을 미끼로 자동차 편취

- ◆ 피해자 A씨는 B씨로부터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} **수익금을 미끼로 피해자를 현혹**
 -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 } **직접 대출 신청**
 - A씨는 지인 B씨가 시키는 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 } **사기범 말에 따라 거짓 답변**
 -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 } **사기범 잠적**
- ▶ A씨는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곤란(자동차대출 상환의무 부담)

② 한 명에게 다수 자동차 편취

- ◆ 피해자 D씨는 렌터카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지인 E씨로부터 리스를 받아 자동차를 제공해주면 리스료도 내주고 사업 수익금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} **수익금을 미끼로 피해자를 현혹**
 - D씨는 E씨로부터 다수의 리스 계약을 통해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F캐피탈과 G캐피탈에서 리스 계약을 각각 체결(총 2건) } **사기범 제안에 다수의 자동차 금융 이용**
 - D씨는 2대의 리스차량을 E씨에게 넘겨주었으나, 자동차를 받은 E씨는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 } **사기범 잠적**
- ▶ D씨는 리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는바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곤란(자동차 리스료 납부 및 반환의무 부담)

II. 자동차금융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

■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음

-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자동차 금융(대출·리스·할부)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됨
- 특히,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(운용리스)도 부담

■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역시 피해구제가 어려움

-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
- 해피콜 등 금융회사의 문의에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

■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-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제출서류를 위·변조 하는 등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*을 입거나,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

* (예) 한국신용정보원에 "금융질서문란행위자"로 등재될 경우 계좌개설, 대출신청, 보험가입 등에 불이익 발생

Ⅲ.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

1 상품설명서를 통해 소비자 안내 강화

- ☐ (현행)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음
- ☐ (개선)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*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

* 사기유형은 최근 사례 중심으로 여전사가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안내 가능

- 소비자가 동 안내 내용을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마련

참고 자동차 금융사기 유의사항 안내(예시)

다음과 같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, 현금 용통을 해 준다고 약속하면서 자동차를 대신 구매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 **자동차 금융사기가 빈번히 발생**하고 있습니다.

[사례1] 렌터카 사업에 쓸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추가 수익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, 렌터카 사업자가 자동차만 받고 잠적

[사례2] 중고차 수출업자가 중고차를 비싸게 매입해 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해 주었으나, 중고차 수출업자가 자동차만 받고 잠적

[사례3]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를 대출로 구매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싼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으나 연락이 두절됨

상기와 같은 목적 또는 이유로 자동차 금융을 신청하시는 경우 자동차는 받지 못하고, 대출 원리금만 떠안는 등 **예상하지 못한 피해**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확인하십니까?

- ☐ 예 ☐ 아니요

2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 개선

- ☐ (현행)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·할부·리스 상품을 신청하여도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확대

* 여전사가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자동차 할부의 경우 일반할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조회가 되나, 자동차 대출리스의 경우 각각 "신용담보대출" 및 "금융운용리스"로 통합되어 표시됨

- **(개선)**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(한국신용정보원)를 개선

<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전후 비교>

구 분	현 행	개 선
자동차 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용대출·담보대출로 조회 - 담보권 설정시 기타담보대출(290) - 담보권 미설정시 신용대출(100) - 보증서 담보시 지급보증(보증서) 담보대출(240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차 대출 구분 가능(하위코드 신설) - 기타담보대출(290) - 자동차(01) - 신용대출(100) - 자동차(01) - 지급보증(보증서) 담보대출(240) - 자동차(01)
자동차 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·운용리스로 조회 - 금융리스(700) - 운용리스(710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차 리스 구분 가능(하위코드 신설) - 금융리스(700) - 자동차(01) - 운용리스(710) - 자동차(01)
자동차 할부	- 신차 할부(500) - 중고차 할부(510)	• 현행과 같음

- 아울러, 자동차 금융을 2건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차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메시지 발송

참 고 메시지 발송 내용(예시)

- ▶ 최근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이고 자동차만 받고 잠적하는 등 자동차 금융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대출명의를 빌려주거나 사기에 연루되는 등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3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·재직서류 검증 강화

- **(현행)** 일부 여전사가 소득·재직 확인시 소비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 존재

* (예) 고수익을 미끼로 무직자에게 허위 소득·재직증빙 자료 제출 유도

- **(개선)**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·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*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

* (예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가입자의 소득 및 재직사실 확인

-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면담, 전화, 실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

IV. 추진 계획

- '23.7월말까지 여전사 상품설명서 개정,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 체계 개선 등을 완료하고 8.1일부터 시행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<p>※ 보도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카드뉴스는 금융감독원 공식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드뉴스 <p>https://blog.naver.com/fss2009/223168617474</p>	<div data-bbox="1128 221 1267 262" data-label="Section-Header"> <p>카드뉴스</p> </div> <div data-bbox="1094 273 1283 456" data-label="Image"> </div>
--	--